

글로벌 에너지 정책 “지각변동”

일본 원전사고 영향 ... 유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심 급증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Fukushima)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서원 책임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3월15일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 역시 스트라스부르그 시의회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고, 이태리는 2008년 도입된 원전 재도입 법안을 전면 중지기로 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지만, 민간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원전 건설회사 NRG Energy는 지금까지 4억8000만달러를 투입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중국과 인디아는 일단 원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이는 일본의 원전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제안단계에 있던 원전 5기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서원 연구원은 원전에 대한 각국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해왔지만, 원전 사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정부와 관련기업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앞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09>